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11월 21일(일) 오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	--	--	--	--	--	--	--	--

 성명 ()

<유의사항 : 아래 내용 위반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함>

1. 답안의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펜을 사용하시고, 다른 펜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하므로 유의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5. 답안 작성 시 논제번호(예: I, II...)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논제별 소문항번호(예: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하시오.
6.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하고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오.
7.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8. 지정된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오.
9. **사회계 문제지는 총 2장 4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영국 런던 스모그, 일본 미나마타병 등과 같은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자원의 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러 국제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거론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시간(Earth Hour)'은 '지구를 위한 한 시간'이란 뜻으로 일 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60분 동안 지구촌 전등을 모두 꺼서 지구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구의 시간은 세계자연보호기금 주도로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3월 넷째 주 토요일에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의 참여 도시에서 정해진 시각에 소등을 한다.

[나]

코로나19 무료 선별검사가 문을 닫는다.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헬스장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 미국과 주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다. 경제를 필두로 거의 전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무화 정책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백신을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제한과 압박으로 바뀔 거란 얘기다. 접종률 90% 달성을 목표로 이미 정부는 12~17세와 임신부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뒤흔들린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병으로 떠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백신 부작용이다. 미열이나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안내한 심각한 부작용도 여럿이다. 특히 청장년층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혈병, 부정출혈(하혈), 손발 저림과 마비증상, 치주염(잇몸 붓기) 등의 이상 반응과 심지어 가족, 친지, 지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인터넷 공간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반응은 일관된다. '해당 부작용은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본래 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 내용이나 수치가 아니면 명확한 판단이나 결론을 말하기를 꺼린다. 현재로서는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 밝혀진 것도 아니고,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을 거듭 모니터링할 만큼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과 정부의 대응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백신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면 그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

[다]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02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같은 해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연장선에서 최근 모자보건법, 건강가정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임신, 출산 및 보육 지원 등의 재생산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 확대해 왔다. 현재 실행 중인 다양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나,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 산모와 영유아의 인권과 복리의 충분한 보장은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산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권리 보장은

<뒷면에 계속>

다 인구 감소 또는 증대를 위한 정책 중심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율이 높았던 과거에는 여성의 높은 출산율이 국가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 보고 국가가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통제하였다면, 현재의 저출산 시기에는 출산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의무를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산은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도 "인구 개발 정책이 인구 수 조절, 국가 발전 등의 특정한 인구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개인의 욕구, 열망,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재생산 권리를 포함해 인권,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삶의 질 향상이 정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성(性)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김 군, 잘 지내는가? 취직 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겠지? 지난해 만났을 때 자네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 솔직히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고.

나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라고 믿네.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겠지.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 했네. 통일 문제를 돈으로 따지는 세태는 국가나 민족도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 주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물론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될 것일세. 이제까지 한국은 해양 경제권에 진출해서 그만큼 성공했지만, 지금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지. 통일이 되면 대륙 경제권으로 진출해서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딜레마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지. 물론 당장은 부담이 좀 오겠지. 그러나 통일 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만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네. 아마도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것만으로 전 세계 뉴스가 되고 투자처를 찾는 수많은 국제 투자자가 몰려들 것이지. 그런데도 세금 좀 더 내고 당분간 고생할 것이니 통일은 싫다고 말한다면, 참 난감하네.

자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길러 보게. 고생은 되지만 참 예쁘네. 그런데 요즘 손자 손녀를 본 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들딸 낳았을 때와 또 다르다고.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쁘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홀감이 든다고.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또 그들의 자손이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풍요로운 선진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통일일 것이지. 그래도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므로 기회가 왔는데도 통일을 외면했다고 가정해 보세. 그들 세대가 조상인 자네 세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혹시 나라 잃은 조상 못지않게 못난 조상이었다고 욕하지 않겠는가? 역사의식이란 별것 아니네. 이게 역사의식이지.

[마]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탐닉하기 쉽다. 왜 국가가 이런 일에도 간섭하면 안 되는가? 인터넷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게임을 절제해야 함을 이해시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국가가 이런 일에 대해서도 참견해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쾌락보다 더 해로운 것이 저급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라 한다. 사람들의 저급한 본능에 영합하는 출판물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음란한 그림의 전시나 불경스러운 연극공연, 한마디로 말해 부도덕한 것에 대한 모든 유혹들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는가? 또 잘못된 사회학적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이와 똑같이 사람들과 국가에 대해 해악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타인들을 자극하여 내란이나 외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저속한 만화나 신성 모독적인 비방이 신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활방식에 관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즉시 개인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가 파괴된다.

[바]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 주식(약 2조5천억 원). 이상은 올해 6월 이후 중국 주요 기업들이 사회 기부를 약속한 금액이다. 이윤 추구가 설립의 1차 목표이자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예산을 앞다퉈 기부하고 있다. 또한 불륨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73개의 중국 기업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sperity)'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2021년 8월 17일 중국 중앙재정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한 뒤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이 부유해지는 것으로 인민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며 소수의 부유함도 아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이 회의에서 공동부유에 대해 제시한 구체적 요구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들이 근면한 노동과 상부상조를 통해 생활이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자강하며 조화롭고 모두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인류와 사회 전반의 진보를 실현하고 행복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음 장에 계속>

[사]

인간은 다음 네 가지 특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합리성과 보편 의지를 갖는다. 둘째,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회는 인간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인간은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외부 감시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받아야 한다. 넷째, 인간은 자기 계발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부여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타인의 재능 발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회 구조를 타파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교황이 신을 매개한다고 보는 이전의 가톨릭 교리 대신에 개인이 직접 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개신교 교리를 종교개혁 시기 유럽에 전파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과 신을 매개하는 사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정치적으로는 종파, 길드, 노조, 무역 연합, 시민 단체,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기타 조직 등과 같은 시민과 국가 간의 매개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경제적으로는 사유 재산권이 있는 개인이 벌이는 활동을 토대로 경제를 조직하게 하며 개인을 독과점자가 없는 경쟁 시장의 참여자로 만든다.

[아]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 주는 /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짚 걸어 놓고 /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 한밤중 동네 개 쾅쾅 짖어 그 짚신 짙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으니
아이들이,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숨게 비취 주고 있지 않으나.

* 말쿠지: 말코지. 물건을 걸기 위하여 벽 따위에 달아 두는 나무 갈고리.

[자]

경제 생활은 엄밀한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립을 실제로 화해시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사회 전체의 관리 영역에서는 언제나 계획과 자유를 모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약하고 활기 없는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의 타당성을 자유롭게 인정함으로써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자에게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충분히 부여되어야 하고, 노동자도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 영역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요구 사항, 즉 계획과 자유의 대립을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영성한 타협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립항의 한 쪽인 계획에만 집중하면 스탈린주의로 이어진다. 자유에만 집중해도 혼돈으로 빠진다. 그런데도 통상적인 선택은 어느 한 쪽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 대신에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대립항들 중 그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I]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배점 30점]

[문제 II]

[문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뒷면에 계속>

[문제 III]

두 국가 A, B를 가정하자. <표 1>은 두 국가의 연도별 가구당 평균 자녀수(이하 평균 자녀수)를 나타낸다. 국가 A는 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 B는 평균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당해 출산을 하는 가구에 매년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 B의 출산 보조금 정책은 평균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 국가의 평균 자녀수는 매년 일정하게 변한다. 보조금 정책과 시간에 따른 추세 외에 평균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은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1>

연도	가구당 평균 자녀수	
	국가 A	국가 B
2016	2.74	1.89
2017	2.67	1.82
2018	2.6	1.75
2019	2.53	1.71
2020	2.46	1.67
2021	2.39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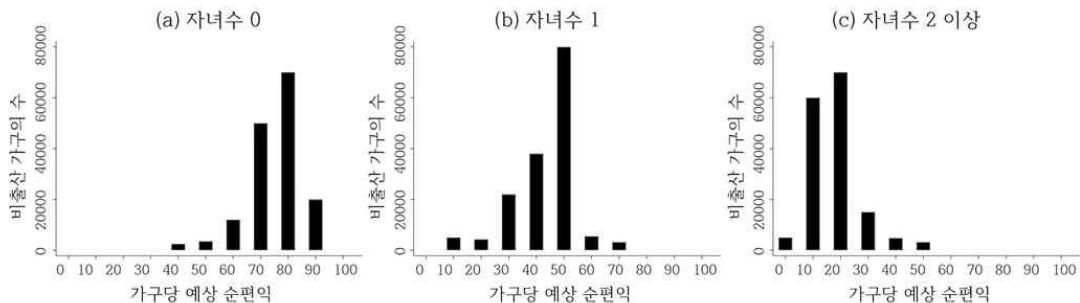
(1) 국가 A, B의 2022년도 예상 평균 자녀수를 각각 구하고, 국가 B의 출산 보조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두 국가의 평균 자녀수의 연도별 추세는 동일하다.)

(2) 국가 B에 대한 아래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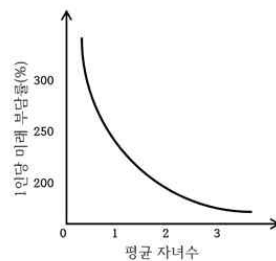
- 국가 B는 미래에 자녀들이 부모 세대 모든 가구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미래에 자녀에게 부모 세대에 대한 복지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들 신경 쓰는 부모에게 비용이 된다.
- 자녀의 미래 1인당 부모 세대에 대한 복지 부담률(이하 1인당 미래 부담률)이 커질수록 부모에게 발생하는 비용도 증가한다.
- <그림 1>은 가임 가구 중 자녀가 없는 비출산 가구만을 대상으로 각 자녀수에 대한 예상 순편익(편익-비용)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 순편익에 대한 해당 가구의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 2>는 평균 자녀수가 1인당 미래 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국가 B는 출산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비출산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국가 B가 부담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그림 1>



<그림 2>

<끝>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I)문항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영국 런던 스모그, 일본 미나마타병 등과 같은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자원의 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러 국제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거론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시간(Earth Hour)’은 ‘지구를 위한 한 시간’이란 뜻으로 일 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60분 동안 지구촌 전등을 모두 꺼서 지구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구의 시간은 세계자연보호기금 주도로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3월 넷째 주 토요일에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의 참여 도시에서 정해진 시각에 소등을 한다.

[나]

코로나19 무료 선별검사가 문을 닫는다.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헬스장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서가 있어야 한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 미국과 주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다. 경제를 필두로 거의 전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무화 정책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백신을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제한과 압박으로 바뀔 거란 얘기다. 접종률 90% 달성을 목표로 이미 정부는 12~17세와 임신부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병으로 떠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백신 부작용이다. 미열이나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안내한 심각한 부작용도 여럿이다. 특히 청장년층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혈병, 부정출혈(하혈), 손발 저림과 마비증상, 치주염(잇몸 붓기) 등의 이상 반응과 심지어 가족, 친지, 지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인터넷 공간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반응은 일관된다. ‘해당 부작용은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본래 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 내용이나 수치가 아니면 명확한 판단이나 결론을 말하기를 꺼린다. 현재로서는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 밝혀진 것도 아니고,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을 거듭 모니터링할 만큼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과 정부의 대응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백신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면 그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

[다]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02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같은 해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연장선에서 최근 모자보건법, 건강가정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의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임신, 출산 및 보육 지원 등의 재생산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 확대해 왔다. 현재 실행 중인 다양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나,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 산모와 영유아의 인권과 복리의 충분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산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권리 보장보다 인구 감소 또는 증대를 위한 정책 중심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율이 높

있던 과거에는 여성의 높은 출산율이 국가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 보고 국가가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통제하였다면, 현재의 저출산 시기에는 출산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의무를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산은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도 “인구 개발 정책이 인구 수 조절, 국가 발전 등의 특정한 인구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개인의 욕구, 열망,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재생산 권리를 포함해 인권,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삶의 질 향상이 정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성(性)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김 군, 잘 지내는가? 취직 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겠지? 지난번 만났을 때 자네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 솔직히 우리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고.

나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라고 믿네.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겠지.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잘사는 국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 했네. 통일 문제를 돈으로 따지는 세태는 국가나 민족도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 주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물론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될 것일세. 이제까지 한국은 해양 경제권에 진출해서 이만큼 성공했지만, 지금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네. 통일이 되면 대륙 경제권으로 진출해서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딜레마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네. 물론 당장은 부담이 좀 오겠지. 그러나 통일 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만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네. 아마도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것만으로 전 세계 뉴스가 되고 투자처를 찾는 수많은 국제 투자가가 몰려들 것이네. 그런데도 세금 좀 더 내고 당분간 고생할 것이니 통일은 싫다고 말한다면, 참 난감하네.

자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길러 보게. 고생은 되지만 참 예쁘네. 그런데 요즈음 손자 손녀를 본 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들딸 낳았을 때와 또 다르다고.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홀감이 든다고.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또 그들의 자손이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풍요로운 선진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통일일 것이네. 그래도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므로 기회가 왔는데도 통일을 외면했다고 가정해 보세. 그들 세대가 조상인 자네 세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혹시 나라 잃은 조상 못지않게 못한 조상이었다고 욕하지 않겠는가? 역사의식이란 별것 아니네. 이게 역사의식이네.

[마]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탐닉하기 쉽다. 왜 국가가 이런 일에도 간섭하면 안 되는가? 인터넷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게임을 절제해야 함을 이해시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국가가 이런 일에 대해서도 참견해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쾌락보다 더 해로운 것이 저급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라 한다. 사람들의 저급한 본능에 영합하는 출판물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음란한 그림의 전시나 불경스러운 연극공연, 한마디로 말해 부도덕한 것에 대한 모든 유혹들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는가? 또 잘못된 사회학적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이와 똑같이 사람들과 국가에 대해 해악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타인들을 자극하여 내란이나 외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저속한 만화나 신성모독적인 비방이 신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활방식에 관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즉시 개인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가 파괴된다.

[바]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 주식(약 2조5천억 원). 이상은 올해 6월 이후 중국 주요 기업들이 사회 기부를 약속한 금액이다. 이윤 추구가 설립의 1차 목표이자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예산을 앞다퉈 기부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73개

의 중국 기업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sperity)’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2021년 8월 17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한 뒤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이 부유해지는 것으로 인민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며 소수의 부유함도 아니고 확실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이 회의에서 공동부유에 대해 제시한 구체적 요구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들이 근면한 노동과 상부상조를 통해 생활이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자강하며 조화롭고 모두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인류와 사회 전반의 진보를 실현하고 행복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

[논제 I]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0점]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오전)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과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두 관점 중 응시생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관점을 바탕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지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수리 문항은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와 그래프 해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의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논제 I>은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첫 번째 관점은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응시생들은 주어진 제시문들을 두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만점: 논제 당 100점 (3논제 도합 300점)

기본 점수: 논제당 60점

기준 점수: 상(100점 ~ 90점), 중(89점 ~ 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 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 ~ 20자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5점이나 1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 *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했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1> (501~600자)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300자 ~ 400자 미만: 감점 10점

400자 이상 ~ 450자 미만: 감점 5점

650자 이상 ~ 700자 미만: 감점 5점

700자 이상: 감점 10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논제 1>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바]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라],[바]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인 반면, [나],[다],[마]는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가],[라],[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나],[다],[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9	265쪽, 272쪽	[가]	O
반드시 맞아야 할까... '백신 의무화' 전 생각해 볼 몇 가지	이소아	중앙일보	2021	https://url.kr/f2blpn	[나]	O
'상·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신옥주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 위원칼럼	2021	https://url.kr/k4hago	[다]	O
고등학교 국어(「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김 군에게)	윤영관	미래앤	2018	169-170쪽	[라]	X
자유주의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 이지순 옮김	자유기업원	2020	98-99쪽	[마]	O
나라경제	박준석	KDI	2021	58-60쪽	[바]	O

		경제정보센터				
월간중국	경제일보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2021	8쪽. 원문: https://url.kr/k4hago	[바]	0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1>

[가]-[바]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라],[바]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인 반면, [나],[다],[마]는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가]는 대규모 환경오염을 경험한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환경 운동을 실천하는 사례이다. [라]는 통일이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한국 시민 전체가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바]는 개별 기업의 전체 인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국의 ‘공동부유’에 관한 설명이다.

반면 [나]는 정부의 백신 의무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꺼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됨을 서술하고 있다. [다]는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 정책이 인구 감소 또는 증대를 위한 정책임을 비판하고 그것이 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는 국가가 개인의 세세한 생활 방식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즉시 개인의 자유가 파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585자)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Ⅱ)문항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영국 런던 스모그, 일본 미나마타병 등과 같은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자원의 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러 국제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거론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시간(Earth Hour)’은 ‘지구를 위한 한 시간’이란 뜻으로 일 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60분 동안 지구촌 전등을 모두 꺼서 지구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구의 시간은 세계자연보호기금 주도로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3월 넷째 주 토요일에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의 참여 도시에서 정해진 시각에 소등을 한다.

[나]

코로나19 무료 선별검사가 문을 닫는다.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헬스장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서가 있어야 한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 미국과 주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다. 경제를 필두로 거의 전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무화 정책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백신을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제한과 압박으로 바뀔 거란 얘기다. 접종률 90% 달성을 목표로 이미 정부는 12~17세와 임신부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병으로 떠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백신 부작용이다. 미열이나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안내한 심각한 부작용도 여럿이다. 특히 청장년층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혈병, 부정출혈(하혈), 손발 저림과 마비증상, 치주염(잇몸 붓기) 등의 이상 반응과 심지어 가족, 친지, 지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인터넷 공간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반응은 일관된다. ‘해당 부작용은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본래 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 내용이나 수치가 아니면 명확한 판단이나 결론을 말하기를 꺼린다. 현재로서는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 밝혀진 것도 아니고,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을 거듭 모니터링할 만큼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과 정부의 대응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백신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면 그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

[다]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02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같은 해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연장선에서 최근 모자보건법, 건강가정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의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임신, 출산 및 보육 지원 등의 재생산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 확대해 왔다. 현재 실행 중인 다양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나,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 산모와 영유아의 인권과 복리의 충분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산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권리 보장보다 인구 감소 또는 증대를 위한 정책 중심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율이 높

있던 과거에는 여성의 높은 출산율이 국가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 보고 국가가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통제하였다면, 현재의 저출산 시기에는 출산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의무를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산은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도 “인구 개발 정책이 인구 수 조절, 국가 발전 등의 특정한 인구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개인의 욕구, 열망,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재생산 권리를 포함해 인권,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삶의 질 향상이 정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성(性)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김 군, 잘 지내는가? 취직 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겠지? 지난번 만났을 때 자네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 솔직히 우리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고.

나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라고 믿네.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겠지.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잘사는 국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 했네. 통일 문제를 돈으로 따지는 세태는 국가나 민족도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 주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물론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될 것일세. 이제까지 한국은 해양 경제권에 진출해서 이만큼 성공했지만, 지금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네. 통일이 되면 대륙 경제권으로 진출해서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딜레마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네. 물론 당장은 부담이 좀 오겠지. 그러나 통일 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만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네. 아마도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것만으로 전 세계 뉴스가 되고 투자처를 찾는 수많은 국제 투자가가 몰려들 것이네. 그런데도 세금 좀 더 내고 당분간 고생할 것이니 통일은 싫다고 말한다면, 참 난감하네.

자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길러 보게. 고생은 되지만 참 예쁘네. 그런데 요즈음 손자 손녀를 본 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들딸 낳았을 때와 또 다르다고.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홀감이 든다고.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또 그들의 자손이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풍요로운 선진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통일일 것이네. 그래도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므로 기회가 왔는데도 통일을 외면했다고 가정해 보세. 그들 세대가 조상인 자네 세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혹시 나라 잃은 조상 못지않게 못한 조상이었다고 욕하지 않겠는가? 역사의식이란 별것 아니네. 이게 역사의식이네.

[마]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탐닉하기 쉽다. 왜 국가가 이런 일에도 간섭하면 안 되는가? 인터넷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게임을 절제해야 함을 이해시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국가가 이런 일에 대해서도 참견해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쾌락보다 더 해로운 것이 저급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라 한다. 사람들의 저급한 본능에 영합하는 출판물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음란한 그림의 전시나 불경스러운 연극공연, 한마디로 말해 부도덕한 것에 대한 모든 유혹들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는가? 또 잘못된 사회학적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이와 똑같이 사람들과 국가에 대해 해악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타인들을 자극하여 내란이나 외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저속한 만화나 신성모독적인 비방이 신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활방식에 관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즉시 개인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가 파괴된다.

[바]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 주식(약 2조5천억 원). 이상은 올해 6월 이후 중국 주요 기업들이 사회 기부를 약속한 금액이다. 이윤 추구가 설립의 1차 목표이자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예산을 앞다퉈 기부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73개

의 중국 기업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sperity)’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2021년 8월 17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한 뒤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이 부유해지는 것으로 인민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며 소수의 부유함도 아니고 확실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이 회의에서 공동부유에 대해 제시한 구체적 요구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들이 근면한 노동과 상부상조를 통해 생활이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자강하며 조화롭고 모두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인류와 사회 전반의 진보를 실현하고 행복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

인간은 다음 네 가지 특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합리성과 보편 의지를 갖는다. 둘째,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회는 인간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인간은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외부 감시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받아야 한다. 넷째, 인간은 자기 계발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부여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타인의 재능 발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회 구조를 타파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교황이 신을 매개한다고 보는 이전의 가톨릭 교리 대신에 개인이 직접 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개신교 교리를 종교개혁 시기 유럽에 전파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과 신을 매개하는 사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정치적으로는 종파, 길드, 노조, 무역 연합, 시민 단체,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기타 조직 등과 같은 시민과 국가 간의 매개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경제적으로는 사유 재산권이 있는 개인이 벌이는 활동을 토대로 경제를 조직하게 하며 개인을 독과점자가 없는 경쟁 시장의 참여자로 만든다.

[아]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 주는 /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 놓고 /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으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 주고 있지 않느냐.

* 말쿠지: 말코지. 물건을 걸기 위하여 벽 따위에 달아 두는 나무 갈고리.

[자]

경제 생활은 엄밀한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립을 실제로 화해시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사회 전체의 관리 영역에서는 언제나 계획과 자유를 모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약하고 활기 없는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의 타당성을 자유롭게 인정함으로써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자에게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충분히 부여되어야 하고, 노동자도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 영역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요구 사항, 즉 계획과 자유의 대립을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영성한 타협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립항의 한 쪽인 계획에만 집중하면 스탈린주의로 이어진다. 자유에만 집중해도 혼돈으로 빠진다. 그런 데도 통상적인 선택은 어느 한 쪽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 대신에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대립항들 중 그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논제 II]

[논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오전)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과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두 관점 중 응시생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관점을 바탕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지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수리 문항은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와 그래프 해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의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논제 II>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응시생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아],[자]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 하에 자율성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 구조의 타파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나],[다],[마]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아]는 까치밥이 ‘서울 조카아이들’로 상징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개체보다는 전체의 중요성을 우선시하는 [가],[라],[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자]는 사회 전체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별기업의 경영에도 계획과 자유의 가치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체와 전체 중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다],[마]의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 뿐만 아니라 [가],[라],[바]의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과도 구별된다. 응시생들은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만점: 논제 당 100점 (3논제 도합 300점)

기본 점수: 논제당 60점

기준 점수: 상(100점 ~ 90점), 중(89점 ~ 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 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5점이나 1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 *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했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문제 II> (601~700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 ~ 500자 미만: 감점 10점

500자 이상 ~ 550자 미만: 감점 5점

750자 이상 ~ 800자 미만: 감점 5점

800자 이상: 감점 10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문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아래의 내용 참조)

－ [가],[라],[바]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개별 개체보다는 개체가 모여서 구성되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 추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 [나],[다],[마]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개체가 없는 전체란 있을 수 없으며 전체의 이익과 권리의 추구가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무시하거나 희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의 내용 참조)

－ [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 하에 자율성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 구조의 타파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가],[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 [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 하에 자율성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 구조의 타파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나],[다],[마]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의 내용 참조)

－ [아]는 까치밥이 '서울 조카아이들'로 상징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개체보다는 전체의 중요성을 우선하는 [가],[라],[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 [아]는 까치밥이 '서울 조카아이들'로 상징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나],[다],[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의 내용 참조)

-[자]는 사회 전체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도 계획과 자유의 가치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라],[바]의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는 개체와 전체 중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자]는 사회 전체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도 계획과 자유의 가치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다],[마]의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는 개체와 전체 중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9	265쪽, 272쪽	[가]	O
반드시 맞아야 할까... '백신 의무화' 전 생각해 볼 몇 가지	이소아	중앙일보	2021	https://url.kr/f2blpn	[나]	O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신옥주	저출산고령사 회의위원회 위원칼럼	2021	https://url.kr/k4hago	[다]	O
고등학교 국어(「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김 군에게)	윤영관	미래엔	2018	169-170쪽	[라]	X
자유주의	루드비히 폰 미제스 지음, 이지순 옮김	자유기업원	2020	98-99쪽	[마]	O
나라경제	박준석	KDI 경제정보센터	2021	58-60쪽	[바]	O
월간중국	경제일보	(주)아주뉴스코 퍼레이션	2021	8쪽. 원문: https://url.kr/k4hago	[바]	O
공동체 경제학	스티븐 A. 마글린 지음, 윤태경 옮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112-113쪽	[사]	O
2022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시 「까치밥」)	송수권	EBS	2021	98쪽	[아]	X
작은 것이 아름답다-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E. F. 슈마허 지음, 이상호 옮김	문예출판사	2001	326-327쪽	[자]	O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II>

(1) [가],[라],[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개체와 전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나는 [가],[라],[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별 개체보다는 개체가 모여서 구성되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 추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

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 하에 자율성과 사회 생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 구조의 타파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가],[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아]는 까치밥이 ‘서울 조카아이들’로 상징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개체보다는 전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라],[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자]는 사회 전체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도 계획과 자유의 가치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라],[바]의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는 개체와 전체 중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663자)

(2) [나],[다],[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개체와 전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나는 [나],[다],[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체가 없는 전체란 있을 수 없으며 전체의 이익과 권리의 추구가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무시하거나 희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 하에 자율성과 사회 생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 구조의 타파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나],[다],[마]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아]는 까치밥이 ‘서울 조카아이들’로 상징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전체보다 개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나],[다],[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자]는 사회 전체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도 계획과 자유의 가치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다],[마]의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는 개체와 전체 중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695자)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Ⅲ)문항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영국 런던 스모그, 일본 미나마타병 등과 같은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자원의 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러 국제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거론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시간(Earth Hour)’은 ‘지구를 위한 한 시간’이란 뜻으로 일 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60분 동안 지구촌 전등을 모두 꺼서 지구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구의 시간은 세계자연보호기금 주도로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3월 넷째 주 토요일에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의 참여 도시에서 정해진 시각에 소등을 한다.

[논제 Ⅲ]

두 국가 A, B를 가정하자. <표 1>은 두 국가의 연도별 가구당 평균 자녀수(이하 평균 자녀수)를 나타낸다. 국가 A는 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 B는 평균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당해 출산을 하는 가구에 매년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 B의 출산 보조금 정책은 평균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 국가의 평균 자녀수는 매년 일정하게 변한다. 보조금 정책과 시간에 따른 추세 외에 평균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은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1>

연도	가구당 평균 자녀수	
	국가 A	국가 B
2016	2.74	1.89
2017	2.67	1.82
2018	2.6	1.75
2019	2.53	1.71
2020	2.46	1.67
2021	2.39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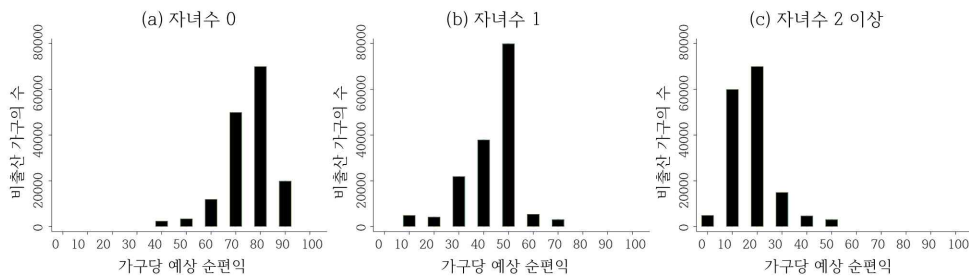
(1) 국가 A, B의 2022년도 예상 평균 자녀수를 각각 구하고, 국가 B의 출산 보조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두 국가의 평균 자녀수의 연도별 추세는 동일하다.)

(2) 국가 B에 대한 아래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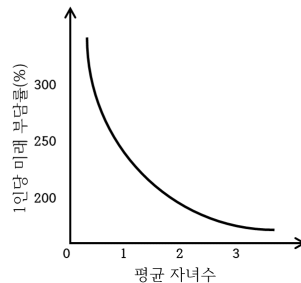
- 국가 B는 미래에 자녀들이 부모 세대 모든 가구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미래에 자녀에게 부모 세대에 대한 복지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를 신경 쓰는 부모에게 비용이 된다.
- 자녀의 미래 1인당 부모 세대에 대한 복지 부담률(이하 1인당 미래 부담률)이 커질수록 부모에게 발생하는 비용도 증가한다.
- <그림 1>은 가임 가구 중 자녀가 없는 비출산 가구만을 대상으로 각 자녀수에 대한 예상 순편익(편익-비용)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 순편익에 대한 해당 가구의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 2>는 평균 자녀수가 1인당 미래 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국가 B는 출산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비출산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국가 B가 부담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그림 1>



<그림 2>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오전)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과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두 관점 중 응시생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관점을 바탕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지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수리 문항은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와 그래프 해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의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문제 Ⅲ>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표 1>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보조금 정책이 평균 자녀수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로 계산해 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감소 추세가 완화됨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림 1>을 해석하여 개인 순편익으로만 출산을 결정할 경우 상당수의 비출산 가구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결과 미래에 출산 가구 자녀들이 비출산 가구의 노후를 책임지게 되어 출산 가구의 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즉,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로부터는 감소 추세인 평균 자녀수로 인해 자녀의 미래 부담률 및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복지 제도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구를 위한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비출산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출산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담금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서술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복지 제도 지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문 [가]의 관점과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만점: 논제 당 100점 (3논제 도합 300점)

기본 점수: 논제당 60점

기준 점수: 상(100점 ~ 90점), 중(89점 ~ 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 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했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III> (원고지 범위 내 자유롭게 작성)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논제 I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국가 A, B의 2022년도 예상 평균 자녀수를 풀이 과정을 통하여 2.32와 1.59로 정확히 계산하였으면 가점 5점
- ② 국가 B가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평균 자녀수 1.47을 구한 후 ①에서 구한 1.59와 비교하여 보조금 정책이 예상 평균 자녀수를 0.12만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가점 5점
- ③ ②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록 평균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면 가점 5점
- ④ <그림 1>을 해석하여 개인 순편익으로만 출산을 결정할 경우 상당수의 비출산 가구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하고 설명하였으면 가점 5점
- ⑤ ④의 결과, 미래에 출산 가구 자녀들이 비출산 가구의 노후를 책임지게 되어 출산 가구의 부모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즉,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면 가점 5점
- ⑥ <그림 2>로부터 감소 추세인 평균 자녀수로 인해 자녀의 미래 부담률 및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파악하고, 그 결과 복지 제도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추론하였으면 가점 5점

- ⑦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구를 위한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비출산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출산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서술하고, 이는 복지 제도 지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문 [가]의 관점과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면 가점 10점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9	265쪽, 272쪽	제시문 [가]	○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Ⅲ>

(1) 국가 A, B의 2016년 평균 자녀수를 각각 K_A , K_B 라 하고 2016년부터 매년 $T=0, 1, \dots, N$ 의 값을 가진다고 하자. 보조금 효과는 $a(T-2)$ (단, $T \geq 3$)로 측정되며 <표 1>로부터 $a=0.03$ 이므로, 국가 A, B의 2022년($T=6$) 예상 평균 자녀수는 각각 $K_A - 0.07T = 2.32$, $K_B - 0.07T + 0.03(T-2) = 1.59$ 이다. 만약 국가 B가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예상 평균 자녀수는 $K_B - 0.07T = 1.47$ 이 된다. 따라서 비록 평균 자녀수는 계속 감소하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그 추세가 완화되어, 2022년 평균 자녀수는 $0.12 (= 1.59 - 1.47)$ 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그림 1>은 개인 순편익으로만 출산을 결정할 경우 상당수의 비출산 가구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출산 가구 자녀들이 비출산 가구의 노후를 책임지게 되어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그림 2>는 줄어드는 평균 자녀수로 인해 자녀의 미래 부담을 및 부모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의미하고, 이는 복지 제도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든 가구를 위한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비출산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출산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복지 제도 지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문 [가]의 관점과 부합한다.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11월 21일(일) 오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	--	--	--	--	--	--	--	--

 성명 ()

<유의사항 : 아래 내용 위반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함>

1. 답안의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펜을 사용하시고, 다른 펜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하므로 유의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5. 답안 작성 시 논제번호(예: I, II...)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논제별 소문항번호(예: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하시오.
6. 답안 작성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하고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오.
7.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8. 지정된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오.
9. **사회계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1970년대에 이탈리아에서는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협상을 통해 생활비용 증가와 연계해 임금을 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단체교섭의 역할이 중요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하고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피케티는 프랑스에서 소득 분배의 방향이 바뀐 것은 국가의 임금 정책, 특히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결과라고 말한다. 네덜란드 정부도 1974년에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으로 인해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이 줄었다. 이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임금 차별을 없애는 법이 발효되었다. 영국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이러한 법의 결과이다.

[나] 시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누군가는 숙련도가 대동소이한 분야에서 사회적 소수에게 일정 비율의 일자리를 나눠주는 할당제를 주장할 수 있다. 숙련도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즉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수자 우대 채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노동의 숙련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박사학위 취득 비율을 조사하여 그 비율만큼 여성의 대학 교원 임명을 할당한다고 해보자. 그것은 바로 모든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개인의 재능이나 업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련도가 동일하다면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직업에서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본령인 교육과 연구는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개인의 우수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이 갖고 있는 역설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성, 인종, 나이, 계층 등)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비판해온 인본주의적 가치와 정반대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권리, 창의성,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개인이 아무리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집단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실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러나 신은 여러분을 만들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을 섞었습니다. 금이 섞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은 수호자들에게는 은을 섞었고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자신과 달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며, 반대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계급의 사람들도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급으로부터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손이 훌륭한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손의 혼에 무슨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자손의 혼이 철이나 청동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결코 동정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해서 농부나 장인이 되게 하고, 자손의 혼이 황금이나 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예우하여 통치자나 수호자로 만들면 됩니다. 이는 철이나 청동의 성분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삶을 꾀하게 된다. 본능을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혹은 사회가 이기심으로 팽배해진 후에야 그 본능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인간이 하등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군집 충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낙오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오직 이성에서만 도출하여 이성과 본능을 대립시키는 합리주의적 도덕가들은 사회적 본능의 도덕적 자질을 평가절하하는 불

< 뒷면에 계속 >

합리를 저질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사회적 본능은 자연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 도덕의 유일한 기초는 아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이성에 비해 훨씬 깊은 도덕성의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 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김○○ 씨의 소득은 실직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러 고용주에게 해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기부양법’에 따라 정부가 2,500억 달러(약 310조 원)를 투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에는 각 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균 실업급여는 주당 371달러이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되면 작년 4분기 미국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 6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얻는 소득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더 크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A씨는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경기부양법을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것은 이러한 과다한 실업급여 혜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헤리티지재단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로 인해 약 1,390만 명의 추가 실업자와 1조 4,9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실업 여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의 폐단을 보여준다.

[바] 사회 발전의 속도는 권력과 지능의 결합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한 세기 전 영국은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도 육체노동의 굴레를 씌우면서 자원을 탕진했으며, 자기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시도하는 하층 계급 성원들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학교와 제조업은 점차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는 각 세대의 똑똑한 아이들에게 지위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조치였다. 지능 지수가 13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었지만,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요구받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났다. 그 결과 러더퍼드 같은 재벌,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 에드워드 엘가 같은 음악가가 나타났다. 문명은 둔감한 대중, 곧 일반적 감각을 지닌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문명은 창조적 소수, 곧 한 번의 손놀림으로 1만 명의 노동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총명한 소수, 유전적 세습을 생물학적 사실만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로 만들어가는 엘리트들에 달려 있다. 능력이 우월한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엘리트들의 권력은 한없이 커지고 있다. 발전이란 곧 엘리트들의 승리이며, 현대 세계는 엘리트들의 금자탑이다.

그렇지만 만약 사회 발전에 따르는 희생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은밀히 퍼지는 이기심의 희생양이 된다. 능력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풍조가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 명을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려지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버려진 사람들의 처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자.

[사] 요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결과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죠? 그중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예요. ‘배리어 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해요.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자격,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있어요. 그 도시는 바로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시예요. △△시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로, ‘무장애 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내 시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횡단보도에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도입했고, 식당, 병원, 대형 마트, 금융 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문턱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자발적 성금, 재능 기부,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아] 모든 역사적 과정에는 대부분 일정한 과오가 있겠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들의 착취나 수탈이 경제 발전과 부의 축적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영향’ 정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모험정신이 발전의 동력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 문제도 사회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분배의 문제는 정당한 취득과 권한의 원리, 즉 소유권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득한 재산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려야 할 대가로 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에 불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논리를 ‘강자의 논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의 정당성은 불평등의 규모에 따른 게 아니라 취득 수단과 과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교환의 공정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정한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 곧 시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의한 재분배는 오히려 개인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사회정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 다음 장에 계속 >

[문제 I]

제시문 [가] ~ [마]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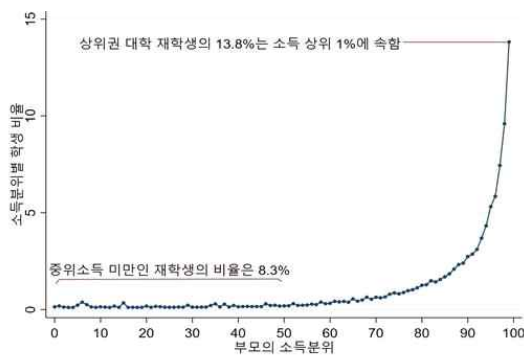
[문제 II]

[문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바], [사], [아]를 평가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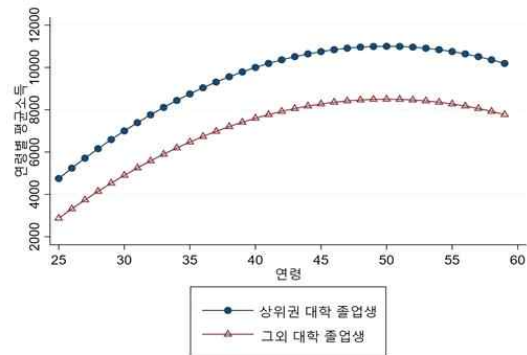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III]

국가 A에는 학생들이 가장 입학하기를 원하는 10개의 상위권 대학이 있다. 입학은 대학입학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자 K는 상위권 대학에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학생 부모의 소득 수준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아래의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나 있다. <자료 1>은 상위권 대학 내에서 부모의 소득분위(x축)별 학생의 비율(y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분위가 99라는 것은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1>에서 소득분위 99에 해당하는 y값은 13.8로 이는 상위권 대학 재학생의 13.8%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부모의 소득분위가 0에서부터 49까지의 학생 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되는데 이는 8.3%이다. <자료 2>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의 각 연령별 평균소득과 그 이외 대학 졸업생의 연령별 평균소득을 나타낸다.



<자료 1>



<자료 2>

(1) <자료 1>과 <자료 2>의 결과들이 [문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학생의 노력 $x(0 \leq x \leq \frac{1}{2})$ 와 부모의 소득 수준(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두 계층으로 구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그 이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부모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노력의 2배인 $2x$ 이며, 저소득층인 학생이 입학할 확률은 그 학생이 들인 노력 수준과 같은 x 이다. 학생이 들인 노력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데, 고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의 비용은 $5x^2$ 이며 저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의 비용은 $4x^2$ 이다. 국가 A의 화폐단위는 비트이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면 평생 동안 10비트의 소득을 얻으며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9비트의 소득을 얻게 된다.

학생의 노력 수준이 임의의 x 일 때 부모가 고소득층인 학생의 순소득(평생소득-비용)의 기댓값과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각각 계산하여 x 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 각각에 대해 순소득의 기댓값을 최대로 하는 노력 수준을 구하시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아]를 평가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 끝 >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1) 문항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1970년대에 이탈리아에서는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협상을 통해 생활비용 증가와 연계해 임금을 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단체교섭의 역할이 중요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하고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피케티는 프랑스에서 소득 분배의 방향이 바뀐 것은 국가의 임금 정책, 특히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결과라고 말한다. 네덜란드 정부도 1974년에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으로 인해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이 줄었다. 이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임금 차별을 없애는 법이 발효되었다. 영국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이러한 법의 결과이다.

[나] 시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누군가는 숙련도가 대동소이한 분야에서 사회적 소수에게 일정 비율의 일자리를 나눠주는 할당제를 주장할 수 있다. 숙련도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즉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수자 우대 채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노동의 숙련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박사학위 취득 비율을 조사하여 그 비율만큼 여성의 대학 교원 임명을 할당한다고 해보자. 그것은 바로 모든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개인의 재능이나 업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련도가 동일하다면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직업에서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본령인 교육과 연구는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개인의 우수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이 갖고 있는 역설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성, 인종, 나이, 계층 등)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비판해온 인본주의적 가치와 정반대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권리, 창의성,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개인이 아무리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집단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실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러나 신은 여러분을 만들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을 섞었습니다. 금이 섞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은 수호자들에게는 은을 섞었고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며, 반대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계급의 사람들도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급으로부터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손이 훌륭한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손의 혼에 무슨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자손의 혼이 철이나 청동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결코 동정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해서 농부나 장인이 되게 하고, 자손의 혼이 황금이나 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예우하여 통치자나 수호자로 만들면 됩니다. 이는 철이나 청동의 성분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의 말 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조화로운 삶을 꾀하게 된다. 본능을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혹은 사회가 이기심으로 팽배해진 후에야 그 본능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인간이 하등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군집 충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낙오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오직 이성에서만 도출하여 이성과 본능을 대립시키는 합리주의적 도덕가들은 사회적 본능의 도덕적 자질을 평가절하하는 불합리를 저질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사회적 본능은 자연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 도덕의 유일한 기초는 아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이성에 비해 훨씬 깊은 도덕성의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 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김○○ 씨의 소득은 실직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터 고용주에게 해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기부양법’에 따라 정부가 2,500억 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에는 각 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균 실업급여는 주당 371달러이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되면 작년 4분기 미국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 6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얻는 소득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더 크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A씨는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경기부양법을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것은 이러한 과다한 실업급여 혜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헤리티지재단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로 인해 약 1,390만 명의 추가 실업자와 1조 4,9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실업 여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의 폐단을 보여준다.

[문제 1]

제시문 [가]~[마]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0점]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과 관련하여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 및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분배적 정의, 불평등, 차별 등의 개념은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에 충실하기 위해 원문에 상당한 수준의 첨언과 윤문을 가해 재구성 작업을 했음을 밝힌다. 각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가]	『불평등을 넘어』	앤서니 B. 앳킨슨 저, 장경덕 역	글항아리	2015	112	O
[나]	「On meritocracy and equality」 『Philosophy & Public Affairs』	Daniel Bel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29-68	O
[다]	『국가』	플라톤 저, 박종현 역	서광사	2008	84-85	O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미래엔	2019	109	O
[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트 니버 저,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2016	55	O
[마]	「‘실업급여’ 증독…일터 복귀 않는	김현석	한국경제신문	2020.	S6	O

	미국 근로자들, 『한국경제신문』		문사	6.1.		
[바]	『능력주의』	마이클 영 저, 유강은 역	이매진	2020	29-30	O
[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7	171	O
[아]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80	O
	『히스토리아 대논쟁 2』	박홍순	서해문집	2008	84-85	O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 수리논술 1문제 총 3문제로 구성되었다. 일반논술 문제는 응시생의 이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작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수리논술 문제는 응시생의 자료해석 능력, 수리적 문제풀이능력과 수리적 추론 전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논제 1]은 정의라는 공정성의 가치 추구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의 정당성과 업적(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의 정당성을 비교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대비되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사회적 평등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분배방식이 사람들의 성취동기를 높여주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관점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은 인종, 지역,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1> (501~600자)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300자~400자 미만: 감점 10점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5점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5점

700자 이상: 감점 1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논제 1>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마]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 업적(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분배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다루고 있다. [가]와 [라]는 사회적 조건에서 열세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논증하고 있으며 [나], [다], [마]는 개인의 우수한 자질 계발을 독려하는 능력주의 혹은 업적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가], [라]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나], [다], [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1]

[가]-[마]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 업적(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분배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다루고 있다. [가]와 [라]는 사회적 조건에서 열세에 있는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나], [다], [마]는 개인의 우수한 자질 계발을 독려하는 능력주의 혹은 업적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임금 격차라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한 예이고, [라]는 불리한 조건에 처한 사회적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자연 상태 인간의 이타적 본능에서 찾고 있다.

반면 [나]의 견해는 사회적 소수 그룹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할당은 개인의 정체성이 그룹이 아닌 개개인의 자유와 자질, 창의성에 있다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충돌한다. [다]는 타고난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고, [마]는 실업급여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소득재분배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511자)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II) 문항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1970년대에 이탈리아에서는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협상을 통해 생활비용 증가와 연계해 임금을 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단체교섭의 역할이 중요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하고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피케티는 프랑스에서 소득 분배의 방향이 바뀐 것은 국가의 임금 정책, 특히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결과라고 말한다. 네덜란드 정부도 1974년에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으로 인해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이 줄었다. 이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임금 차별을 없애는 법이 발효되었다. 영국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이러한 법의 결과이다.

[나] 시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누군가는 숙련도가 대동소이한 분야에서 사회적 소수에게 일정 비율의 일자리를 나눠주는 할당제를 주장할 수 있다. 숙련도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즉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수자 우대 채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노동의 숙련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박사학위 취득 비율을 조사하여 그 비율만큼 여성의 대학 교원 임명을 할당한다고 해보자. 그것은 바로 모든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개인의 재능이나 업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련도가 동일하다면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직업에서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본령인 교육과 연구는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개인의 우수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이 갖고 있는 역설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성, 인종, 나이, 계층 등)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비판해온 인본주의적 가치와 정반대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권리, 창의성,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개인이 아무리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집단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실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러나 신은 여러분을 만들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을 섞었습니다. 금이 섞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은 수호자들에게는 은을 섞었고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며, 반대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계급의 사람들도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급으로부터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손이 훌륭한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손의 혼에 무슨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자손의 혼이 철이나 청동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결코 동정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해서 농부나 장인이 되게 하고, 자손의 혼이 황금이나 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예우하여 통치자나 수호자로 만들면 됩니다. 이는 철이나 청동의 성분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의 말 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조화로운 삶을 꾀하게 된다. 본능을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혹은 사회가 이기심으로 팽배해진 후에야 그 본능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인간이 하등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군집 충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낙오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오직 이성에서만 도출하여 이성과 본능을 대립시키는 합리주의적 도덕가들은 사회적 본능의 도덕적 자질을 평가절하하는 불합리를 저질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사회적 본능은 자연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 도덕의 유일한 기초는 아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이성에 비해 훨씬 깊은 도덕성의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 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김○○ 씨의 소득은 실직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터 고용주에게 해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기부양법’에 따라 정부가 2,500억 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에는 각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균 실업급여는 주당 371달러이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되면 작년 4분기 미국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 6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얻는 소득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더 크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A씨는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경기부양법을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것은 이러한 과다한 실업급여 혜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헤리티지재단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로 인해 약 1,390만 명의 추가 실업자와 1조 4,9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실업 여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의 폐단을 보여준다.

[바] 사회 발전의 속도는 권력과 지능의 결합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한 세기 전 영국은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도 육체노동의 굴레를 씌우면서 자원을 탕진했으며, 자기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시도하는 하층 계급 성원들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학교와 제조업은 점차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는 각 세대의 똑똑한 아이들에게 지위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조치였다. 지능 지수가 13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었지만,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요구받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났다. 그 결과 러더퍼드 같은 재벌,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 에드워드 엘가 같은 음악가가 나타났다. 문명은 둔감한 대중, 곧 일반적 감각을 지닌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문명은 창조적 소수, 곧 한 번의 손놀림으로 1만 명의 노동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총명한 소수, 유전적 세습을 생물학적 사실만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로 만들어가는 엘리트들에 달려 있다. 능력이 우월한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엘리트들의 권력은 한없이 커지고 있다. 발전이란 곧 엘리트들의 승리이며, 현대 세계는 엘리트들의 금자탑이다.

그렇지만 만약 사회 발전에 따르는 희생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은밀히 퍼지는 이기심의 희생양이 된다. 능력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풍조가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 명을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려지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버려진 사람들의 처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자.

[사] 요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결과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죠? 그중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예요. ‘배리어 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해요.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자격,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있어요. 그 도시는 바로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시예요. △△시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로, ‘무장애 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내 시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횡단보도에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도입했고, 식당, 병원, 대형 마트, 금융 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문턱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자발적 성금, 재능 기부,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아] 모든 역사적 과정에는 대부분 일정한 과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들의 착취나 수탈이 경제 발전과 부의 축적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영향’ 정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모험정신이 발전의 동력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 문제도 사회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분배의 문제는 정당한 취득과 권한의 원리, 즉 소유권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득한 재산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려야 할 대가로 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에 불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논리를 ‘강자의 논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의 정당성은 불평등의 규모에 따른 게 아니라 취득 수단과 과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교환의 공정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정한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 곧 시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의한 재분배는 오히려 개인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사회정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논제 II]

[논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바], [사], [아]를 평가하십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과 관련하여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 및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분배적 정의, 불평등, 차별 등의 개념은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에 충실하기 위해 원문에 상당한 수준의 첨언과 윤문을 가해 재구성 작업을 했음을 밝힌다. 각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가]	『불평등을 넘어』	앤서니 B. 앳킨슨 저, 장경덕 역	글항아리	2015	112	O
[나]	「On meritocracy and equality」 『Philosophy & Public Affairs』	Daniel Bel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29-68	O
[다]	『국가』	플라톤 저, 박종현 역	서광사	2008	84-85	O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미래엔	2019	109	O
[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트 니버 저,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2016	55	O
[마]	「‘실업급여’ 중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한국경제신문사	2020. 6.1.	S6	O
[바]	『능력주의』	마이클 영 저, 유강은 역	이매진	2020	29-30	O
[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7	171	O
[아]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80	O
	『히스토리아 대논쟁 2』	박홍순	서해문집	2008	84-85	O
<자료 1>, <자료 2>	「Income Segregation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Chetty 외	Oxford University	Forthcoming		O

	Across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ress			
--	---	--	-------	--	--	--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논제 II]는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응시생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사],[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바]는 선천적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자원을 분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희생과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가],[라]의 관점과 유사하다.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라]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아]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다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업적만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생기는 불평등은 분배적 정의를 위한 대가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나],[다],[마]의 관점과 유사하다. 응시생들은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④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⑤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⑥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④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⑤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II> (601~700자)

-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400자~500자 미만: 감점 10점
-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5점
-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5점
- 800자 이상: 감점 10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문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아래의 예를 참조)
- [가],[라]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에게 소득, 기회, 지위와 같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 [나],[다],[마]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최선을 다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바]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라]의 관점은 사회적 약자의 필요에 따른 분배를 옹호하는 [바]와 입장을 같이한다.
 - [나],[다],[마]의 관점에서 보면, [바]는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라]의 관점은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와 맥을 같이한다.
 - [나],[다],[마]의 관점에서 보면, [사]는 업적(능력)과 무관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성취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는 질병이나 가난 등의 타고난 환경에 의해 업적을 쌓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 [나],[다],[마]의 관점은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분배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아]와 유사하다.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II]

(1) [가],[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정당한 분배 기준에 관한 위의 두 가지 관점 중 나는 [가], [라]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소득, 기회, 지위와 같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 [사], [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바]는 선천적 능력과 업적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아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때 다수의 대중이 희생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바]는 [가], [라]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기회와 지위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배리어 프리’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사]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 [라]의 관점과 유사하다. [아]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다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업적만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생기는 불평등은 분배적 정의를 위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가], [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는 질병이나 가난 등의 타고난 환경에 의해 업적을 쌓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680자)

(2) [나], [다], [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정당한 분배 기준에 관한 위의 두 가지 관점 중 나는 [나], [다], [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각자가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 [사], [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바]는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자원을 분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희생과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희생된 다수를 위한 재분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 [다], [마]의 관점에서 보면, [바]는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사]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와 지위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나], [다], [마]의 관점에서 보면, [사]는 업적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면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성취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아]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다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업적만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생기는 불평등은 분배적 정의를 위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아]는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분배의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나], [다], [마]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695자)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Ⅲ)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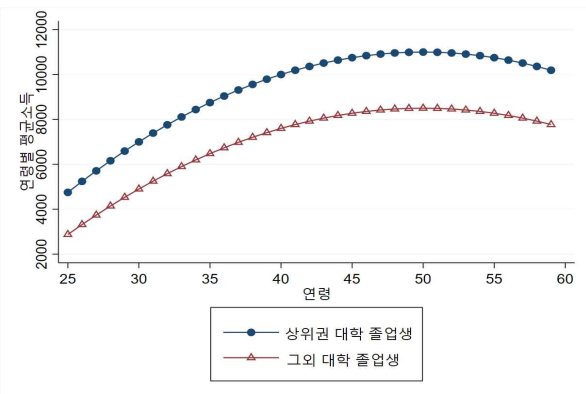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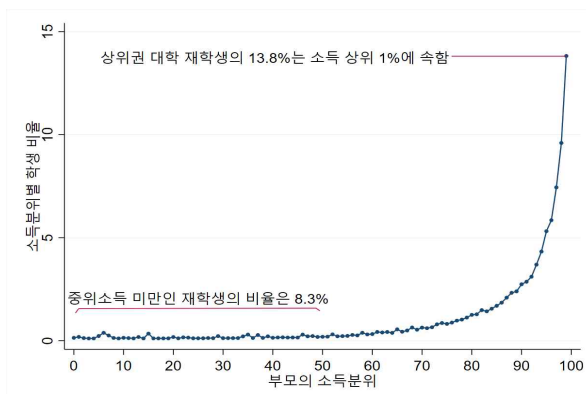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아] 모든 역사적 과정에는 대부분 일정한 과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들의 착취나 수탈이 경제 발전과 부의 축적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영향' 정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모험정신이 발전의 동력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 문제도 사회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분배의 문제는 정당한 취득과 권한의 원리, 즉 소유권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득한 재산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려야 할 대가로 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에 불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논리를 '강자의 논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의 정당성은 불평등의 규모에 따른 게 아니라 취득 수단과 과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교환의 공정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정한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 곧 시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의한 재분배는 오히려 개인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사회정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논제 Ⅲ]

국가 A에는 학생들이 가장 입학하기를 원하는 10개의 상위권 대학들이 있고 대학입학시험 결과에 따라 입학이 결정된다. 연구자 K는 상위권 대학들에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학생 부모의 소득 수준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아래의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나 있다. <자료 1>은 상위권 대학 내에서 부모의 소득분위(x축)별 학생의 비율(y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분위가 99라는 것은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1>에서 소득분위 99에 해당하는 y값은 13.8로 이는 상위권 대학 재학생의 13.8%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부모의 소득분위가 0에서부터 49까지의 학생 비율을 모두 합해서 계산되는데 이는 8.3%이다. <자료 2>는 상위권 졸업생의 각 연령별 평균소득과 그 이외 대학 졸업생의 연령별 평균소득을 나타낸다.



(1) <자료 1>과 <자료 2>의 결과들이 [논제 1]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학생의 노력 $x(0 \leq x \leq \frac{1}{2})$ 와 부모의 소득 수준(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두 계층으

로 구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그 이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부모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노력의 2배인 $2x$ 이며, 저소득층인 학생이 입학할 확률은 그 학생이 들인 노력 수준과 같은 x 이다. 학생이 들인 노력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데, 고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의 비용은 $5x^2$ 이며 저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의 비용은 $4x^2$ 이다. 국가 A의 화폐단위는 비트이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면 평생 동안 10비트의 소득을 얻으며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9비트의 소득을 얻게 된다.

학생의 노력 수준이 임의의 x 일 때 부모가 고소득층인 학생의 순소득(평생소득-비용)의 기댓값과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각각 계산하여 x 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순소득의 기댓값을 최대로 하는 노력 수준을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 각각에 대해 구하시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아]를 평가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과 관련하여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 및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분배적 정의, 불평등, 차별 등의 개념은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에 충실하기 위해 원문에 상당한 수준의 첨언과 윤문을 가해 재구성 작업을 했음을 밝힌다. 각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가]	『불평등을 넘어』	앤서니 B. 앳킨슨 저, 장경덕 역	글항아리	2015	112	○
[나]	「On meritocracy and equality」 『Philosophy & Public Affairs』	Daniel Bel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29-68	○
[다]	『국가』	플라톤 저, 박종현 역	서광사	2008	84-85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미래엔	2019	109	○
[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트 니버저,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2016	55	○
[마]	「‘실업급여’ 중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한국경제신문사	2020. 6.1.	S6	○
[바]	『능력주의』	마이클 영 저, 유강은 역	이매진	2020	29-30	○
[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7	171	○
[아]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80	○
	『히스토리아 대논쟁 2』	박홍순	서해문집	2008	84-85	○

<자료 1> <자료 2>	「Income Segregation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Across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Chetty 외	Oxford University Press	Forthc oming		0
------------------	--	----------	-------------------------------	-----------------	--	---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논제 Ⅲ]은 교육 불평등 및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들이 분배적 정의의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기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또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나오는 기댓값과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차함수(혹은 수학Ⅱ 교과서의 도함수)를 이용하여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의 답을 도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수험생들은 사회 현실을 분석하는 과정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이 중요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⑦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⑧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⑨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⑦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⑧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⑨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Ⅲ>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③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 ④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논제 Ⅲ>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자료 1>에서 상위권 대학에 고소득층 학생들이 집중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자료 2>에서 상위권 대학 졸업생들이 높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음을 설명했으면 가점 10점. 자료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이는 근거가 됨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업적(능력)을 기준으로 한 분배

를 중시하는 제시문들을 비판하면 가점 10점.

- ② 고소득층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의 순수입의 기댓값을 올바르게 구했으면 가점 5점
- ③ 고소득층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각각에 대해 순수입을 최대로 하는 노력수준을 정확하게 구했으면 가점 5점
- ④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같은 수준의 노력을 통해 기대되는 소득이 작아 노력을 적게 하게 되고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제시문 [아]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으면 가점 10점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Ⅲ]

(1) <자료 1>은 상위권 대학 재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며 <자료 2>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이 더 큰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성적에 따른 대학입학이 고소득층 자녀들이 상위권 대학 입학 을 통해 큰 경제적 보상을 얻는, 즉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업적(능력)에 따른 배분을 강조하는 제시문 [나],[다],[마]를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① 1) 고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

$$=2x \times 10 + (1-2x) \times 9 - 5x^2 = -5x^2 + 2x + 9 = -5\left(x - \frac{1}{5}\right)^2 + \frac{46}{5}$$

2)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

$$=x \times 10 + (1-x) \times 9 - 4x^2 = -4x^2 + x + 9 = -4\left(x - \frac{1}{8}\right)^2 + \frac{145}{16}$$

② 따라서 고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최대로 하는 노력수준은 $\frac{1}{5}$ 이며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최대로 하는 노력수준은 $\frac{1}{8}$ 이다.

(미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도 무방하다.

고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미분하면 $-10x + 2$ 이고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 에서 기댓값은 최대가 된다. 이를 만족시키는 x 는 $\frac{1}{5}$ 이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미분하면 $-8x + 1$ 이고 이를 0으로 만드는 x 는 $\frac{1}{8}$ 이다).

③ 제시문 [아]는 능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계산결과는 주어진 노력 수준에 대해 저소득층 학생의 상위권 대학 입학확률이 고소득층 학생의 입학확률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이 노력을 적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아]를 비판할 수 있다.